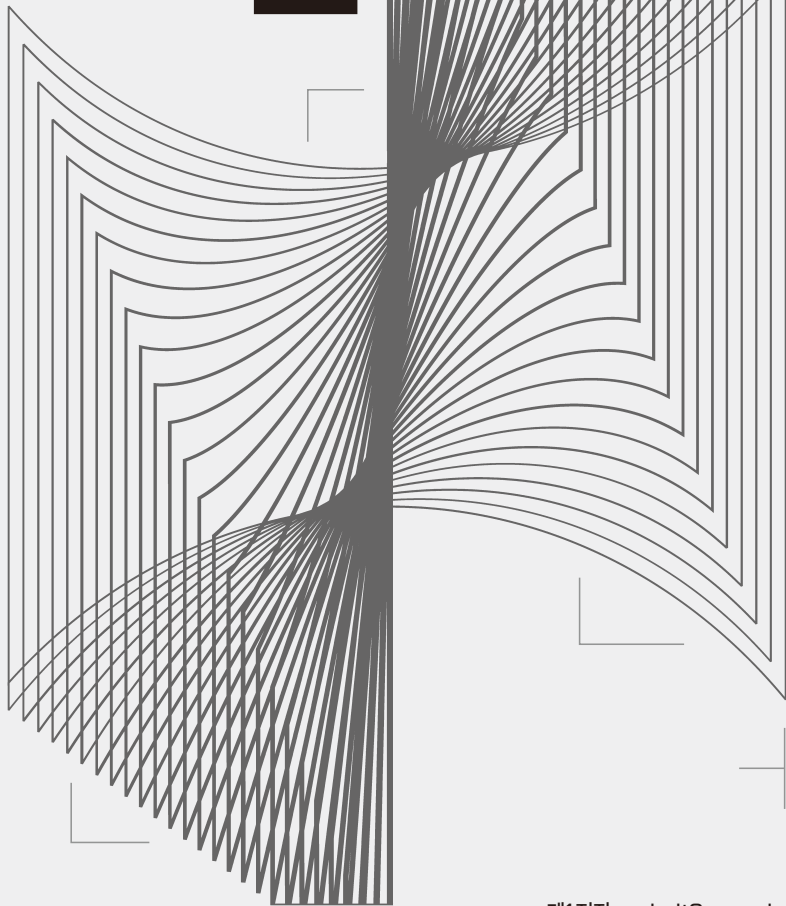


논단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 제59호

(2026/여름)



제1저자, andsalt@pcu.ac.kr

데이터리즘 하의 신자연상태 진단과 일반의지의 역할

윤황(배재대학교 · 임상심리학 · 조교수)

<https://doi.org/10.21738/JHS.2026.8.59.97>

I. 서론

■ 인간은 오랫동안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여겨왔다. 무엇을 믿고, 어디로 향하며,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믿음은 근대적 주체 개념을 떠받쳐 온 토대이기도 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의 인본주의적 자기개념은 오늘날 조용히,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그 흔들림의 진원은 알고리즘이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사고, 누구와 연결될 것인가는 더 이상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의지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정교하게 설계된 추천 시스템이 선택지를 먼저 좁혀 놓고, 인간은 그 안에서 운신하는 존재로 점차 축소되어 간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축소에 그치지 않는다. 알고리즘에 길들여진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하는 주체의 자리를 잃고 외부의 논리에 그저 반응하는 존재로 변해간다. 유발 하라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데이터리즘(Dataism)이라는 이름으로 포착한 바 있는데¹, 그가 진단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에 따른 변화가 아니라 자유의지의 자리를

* 이 논문은 2026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됨.

1 Dataism의 국역 표기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호모데우스 국역본(Harari, 2017/2023)은 데이터교로 옮겼고, 국내 논의에서는 데이터주의, 데이터이즘 등의 표기도 쓰인다. 본 연구는 이를 종교적 현상이나 정치적 주의가 아니라 인간 조건에 대한 하나의 관점으로 다루며, 선행 연구(윤황, 2026)의 표기를 이어 데이터리즘으로 적는다.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이 대체해 나가는 보다 근본적인 전환이다. 이러한 전환 앞에서, 근대 정치철학이 자연상태(state of nature)라는 사고 실험을 통해 제기했던 물음들이 다시금 의미 있게 다가온다. 인간이 어떤 조건에서 출발하는가? 그리고 그 조건이 지닌 불안정성이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어떤 응답이 가능한가? 라는 물음은 홉스, 로크, 루소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씨름했던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세 사상가의 자연상태 논의가 오늘날의 위기를 읽어내는 분석틀로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II. 자연상태 서사의 교차분석

■ 근대 사회계약론은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신의(神意)나 전통이 아니라 구성원의 동의로부터 도출한다. 이 논증 구도에서 요청되는 이론적 장치가 자연상태(state of nature), 곧 정치사회가 성립하기 이전의 인간 조건에 대한 가정이다. Hobbes와 Locke, Rousseau는 각기 다른 자연상태를 상정하였으며, 그 차이는 상이한 정치적 처방으로 귀결된다. 이하에서는 세 사상가의 자연상태를 존재의 동인, 자연인의 본성, 사회계약으로의 이행 논리, 그리고 그것이 예비하는 정치체제라는 네 층위에서 검토한다.

1. Hobbes의 자연상태: 공포와 허영의 전쟁상태

Hobbes(1651/2018)가 그리는 자연상태는 공통의 권력이 부재하는 조건에서 각자가 자기보존의 유일한 심판자로 남겨진 상태이다. 인간은 신체적·정신적 능력에서 대체로 평등하며, 이 평등은 동

일한 대상을 향한 희망의 평등을 낳는다. 두 사람이 같은 것을 원하
되 함께 누릴 수 없을 때, 그들은 적이 되며, 경쟁과 상호 불신, 명예
에 대한 욕구가 인간을 끊임없는 분쟁으로 몰아간다. 요컨대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며, 그 속에서 인간의 삶
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험악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짧다”(Hobbes,
1651/2018).

이 전쟁상태를 추동하는 심리적 동력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폭력적 죽음에 대한 공포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보다 우월한 지위
를 확인받으려는 허영(pride)이다. 공포는 선제공격을 합리적 선택
으로 만들고, 허영은 생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정복을 부추긴
다. 두 정념은 서로를 증폭시키며 투쟁의 악순환을 재생산한다. 요컨
대 Hobbes의 자연인은 공포와 허영이 존재의 동인을 이루며, 이 전
쟁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절대권력과 사회계약을 필요로 한다(윤황,
2026; Hobbes, 1651/2018).

주목할 것은 이행의 논리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평화를 향
한 정념을 낳고, 이성인 그 정념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 곧 평화의 조
향으로서 자연법을 이끌어 낸다. 그러나 칼이 없는 계약은 말에 불과
하므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공통권력이 요구된다. 이에 만인은 상
호 계약을 통해, 자연상태에서 만인이 만물에 대해 갖는 무제한의 권
리인 자연권(jus naturale)을 절대주권자인 리바이어던에게 양도하
는데(Hobbes, 1651/2018), 이 계약은 신민들 상호간에 체결될 뿐 주권자
를 당사자로 하지 않으므로 주권자의 계약 위반을 근거로 한 저항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 자연상태가 참혹할수록, 그로부터의 탈출을
보장하는 절대권력의 필요성은 더욱 정당화된다.

2. Lock의 자연상태: 권리의 불안정한 평화

Locke(1689/2022)의 자연상태는 자연법이 지배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세계로 가정된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누구도 타인의 생명, 자유, 소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자연법의 요구를 인식할 수 있으며, 이 법은 정치권력에 선행하여 각자에게 권리를 부여한다. 따라서 Locke의 자연인은 태생적으로 고유한 권리를 지닌 존재이며, 자연상태는 전쟁상태가 아니라 원리상 평화로운 상태이다.

그러나 이 평화는 불안정하다. 자연상태에는 확립된 법률, 공정한 재판관, 판결을 집행할 권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각자가 자연법의 해석자이자 집행자가 된다.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된 인간의 판단은 편파로 흐르기 쉽고, 그 결과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는 긴장이 상존하며, 권리의 향유는 불확실해진다. 요컨대 Locke의 자연인에게 존재의 동인은 자유와 권리의 보존이고, 그 본성은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는 합리적 존재이지만, 바로 그 권리의 향유가 불안정하기에 자연상태를 벗어날 이유가 발생한다.

이행의 논리는 Hobbes와 뚜렷이 대비된다. Locke의 계약은 공포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이미 보유한 권리를 더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며, 그 형식은 권력의 전면 양도가 아니라 조건부 신탁(trust)이다. 정부의 목적은 소유의 보존에 한정되고, 정부가 그 목적을 배반할 때를 대비해 저항권이 예비된다(Locke, 1689/2022). 즉, 자연상태의 결함이 전면적 파국이 아니라 집행의 불안정에 그치기에, 처방 또한 절대권력이 아니라 제한된 시민정부로 충분한 것이다. 여기서도 Hobbes와 마찬가지로, 자연상태의 성격 규정이 정치적 처방의 성격을 결정하는 논리가 확인된다.

3. Rousseau의 자연상태: 평온한 자연과 타락(墮落)의 운동구조

Rousseau(1755/2003a)의 자연상태는 앞의 두 모델 어느 쪽으로도 환원되지 않는다. 우선 그것은 전쟁상태가 아니다. Rousseau가 보기에 Hobbes는 사회 속에서 형성된 정념을 자연상태에 소급하여 투영하는 오류를 범했다. 공포와 허영은 타인과의 지속적 비교를 전제하는 사회적 정념인 바, 타인과의 안정적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자연상태의 인간에게는 귀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Locke처럼 자연법을 인식하는 합리적 존재를 상정하지도 않는다. 자연인의 이성 아직 잠재 상태에 머물러 있으므로, Rousseau의 자연상태는 자연법이 작동하기 이전의 세계이다.

Rousseau의 자연인은 숲속을 홀로 떠도는 고립된 존재이지만, 그 내면은 결핍이 아니라 균형으로 특징지어진다. 자기보존을 향한 자기사랑(amour de soi)과 동류의 고통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연민(pitié)이 서로를 견제하며(임의영, 2020), 환경적 풍요 속에서 욕구는 필요를 넘지 않고 필요는 곧 충족된다. 비교할 타자가 부재하므로, 우월의 욕망도 인정의 결핍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연상태의 삶은 심리적 평온이 지배하는 자족의 상태라 할 수 있다.

동시에 Rousseau는 인간을 동물과 구별하는 두 가지 고유한 특성을 지적한다. 첫째는 자유의지이다. 본능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자연의 명령을 거스르거나 따르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행위자(agent libre)이다. 스스로 따를 바를 결정하는 이 능력은 훗날 사회계약론에서 스스로 제정한 법에 대한 복종이라는 ‘자기입법(自己立法)’의 이념으로 정식화된다(Rousseau, 1762/2011). 둘째는 완성가능성(perfectibilité)이다. 이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변형시키고 발전시켜 가는 열

린 잠재력으로서, 그 자체로는 선으로도 악으로도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박호성, 1993).

Rousseau의 자연상태 서사가 갖는 고유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방향 없는 잠재력인 완성가능성은 특정한 사회적 조건과 결합할 때 비로소 구체적인 궤적을 갖게 된다. 인구가 증가하고 인간이 정주하며 협업이 시작되자, 고립되어 있던 자연인은 타인과의 지속적 상호 노출 속에 놓인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조건에서 비교가 발생하고, 자기보존을 위한 자기사랑은 타인의 인정과 우월한 지위를 갈구하는 이기심(amour-propre)으로 변질된다. 자기사랑과 연민이 유지하던 내적 균형은 붕괴되고, 인간은 타인의 시선 속에서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존재가 되어 간다.

이러한 심리적 변질은 내면에 머물지 않고 외부 제도를 만들어 낸다. 우월과 소유를 향한 욕망은 사유재산이라는 제도적 형식을 얻는다. 한 뼘기 땅에 울타리를 치고 “이 땅은 내 것이다”라고 선언한 최초의 인간에게서 문명사회의 기원을 찾는 인간불평등기원론 2부의 서두는 이 외화(外化)의 순간을 압축한다(Rousseau, 1755/2003a). 사유재산은 부자와 빈자의 구분을 낳고, 법과 정치제도는 이 불평등을 항구적으로 고착시킨다. 그리고 일단 제도로 굳어진 불평등은 이제 역으로 인간의 내면을 조형한다. 인간은 자신이 만든 제도의 논리에 예속되어, 사회적 위계 속의 위치를 통해서만 스스로를 확인하는 존재로 변해간다. 요컨대 Rousseau의 타락 서사는 ① 완성가능성이라는 내부 잠재력이 ② 정주와 비교라는 사회적 조건과 결합하여 ③ 사유재산과 불평등이라는 제도로 외화되고 ④ 그 제도가 역으로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운동구조를 이룬다. 인간이 만든 것이 인간을 규정하는 이 전도(顛倒)가 Rousseau가 진단한 문명의 병리이다.

이러한 진단은 처방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여기서 다시

Hobbes, Locke와 구별되는 이행의 논리가 성립한다. 타락이 본성 자체의 훼손이 아니라 그 운동구조의 결과라면, 처방 역시 원시로의 회귀가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 간 새로운 관계의 구성이어야 한다. Rousseau(1762/2011)가 사회계약론에서 제시한 처방은 일반의지(volonté générale)에 기초한 정치 상태이다. 일반의지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공통된 이익을 지향하는 의지로서, 구성원 각자가 전체에 결합하면서도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는 결합 형식을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자기입법과 자기복종이 일치할 때, 인간은 욕망에 예속된 자연적 자유를 넘어 도덕적 자유를 획득한다. 요컨대 Hobbes와 Locke의 계약이 자연상태로부터의 탈출 장치라면, Rousseau의 계약은 타락한 사회상태에 대한 재구성의 기획이다. 또한 Hobbes의 전쟁상태와 Locke의 불안정한 평화가 정태적 조건이라면, Rousseau의 자연상태는 그 안에 타락의 운동구조를 지닌다. 자연상태 자체는 평온하지만, 완상가능성이라는 잠재력이 사회적 조건과 만나는 순간 이 구조가 전개되며 서사의 중심에 놓이는 것이다. 정태적으로 주어지는 조건이 아니라 전환의 계기를 지닌 서사라는 점, 이것이 세 자연상태의 교차분석에서 Rousseau의 서사가 갖는 변별적 지위를 이룬다.

4. 목적론적(目的論的) 구성물로서의 자연상태

세 자연상태 서사는 역사적 사실의 기술이 아니다. Hobbes(1651/2018) 스스로 그러한 전쟁상태가 전 세계에 걸쳐 일반적으로 존재했던 적은 없었을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Rousseau(1755/2003a)는 한층 명시적으로 자연상태를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어쩌면 결코 존재한 적도 없고, 아마 앞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듯한 상태이지만, 현재 상태를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정확

한 관념이 필요한” 상태로 규정하였다. 즉 자연상태는 경험적 가설이 아니라, 정치적 논증을 위해 설계된 사고실험이다.

그렇다면 각 사고실험의 설계 원리는 무엇인가? 세 자연상태를 나란히 놓고 보면, 각 자연상태의 성격 규정이 각 사상가가 정당화하고자 하는 정치체계로부터 역산(逆算)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절대주권의 필연성을 논증하려는 Hobbes에게는 어떠한 권력이라도 그것의 부재보다 낫다고 판단될 만큼 참혹한 전쟁상태가 요구된다. 제한정부와 재산권의 우선성을 논증하려는 Locke에게는, 권리가 정치권력에 선행하되 그 권리를 공정하게 집행할 권력이 부재하여 불안정한 상태가 요구된다. 그리고 문명 자체의 병리를 고발하고 그 근본적 재구성을 기획하는 Rousseau에게는 본성의 선택과 문명에 의한 타락이 대비되는 서사가 요구된다. 요컨대 자연상태는, 인간 조건의 출발점에 대한 가정이 정치적 응답의 강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논증 구조 속에서, 결론을 예비하도록 설계된 목적론적 구성물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자연상태론의 적용 범위를 18세기에 한정하지 않게 해 준다. 자연상태론의 본질이 특정 시대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 조건에 대한 근본 가정과 그것이 요청하는 정치적 응답 사이의 논증 구조라면, 인간 조건에 대해 새롭게 제기되는 어떠한 가정에 대해서도 동일한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 조건에 대한 가정은 어떤 상태를 그리고 있으며, 어떤 응답을 예비하는가?’

이 물음을 오늘날에 적용시켜 보면, 서론에서 언급한 Harari의 진단을 자연스럽게 떠올려 볼 수 있다. 자유의지가 알고리즘으로 대체되어 가는 인간, 스스로 판단하는 주체의 자리에서 시스템에 반응하는 존재로 이행하는 인간이라는 Harari(2017/2023)의 인간상은, 인간 조건에 대한 새로운 가정으로서, 곧 우리 시대가 갖는 자연상태

가정으로 읽힐 수 있다. 그리고 이 가정을 Rousseau의 자연상태와 견주어 보면 세 가지 층위의 유사성이 발견된다.

첫째는 서술적 유사성이다. Rousseau의 자연인이 결핍이 아닌 자족과 심리적 평온으로 특징지어지듯이, Harari가 인류사의 출발점으로 그리는 농업혁명 이전의 수렵채집인 역시 사유재산과 위계에 얽매이지 않은 채 상대적 만족과 평온을 누리는 존재로 묘사된다(Harari, 2011/2015). 데이터리즘이 전제하는 오늘날의 위기는 바로 이 평온한 출발점으로부터의 이탈을 배경으로 하는 바, 두 서사는 비교와 소유가 개입하기 이전의 심리적 평온이라는 동일한 성격의 출발점을 공유한다. 둘째는 구조적 유사성이다. Rousseau의 서사가 갖는 타락의 운동구조, 즉 완성가능성이라는 내적 잠재력이 사회적 조건과 결합하여 제도로 외화되고 그 제도가 역으로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는 서사는, 인간의 인지적 잠재력이 알고리즘 시스템이라는 제도적 형식으로 외화되어 역으로 인간의 판단을 조형해 간다는 오늘날의 진단과 궤를 같이 한다. 셋째는 존재론적 유사성이자 그 확장이다. Rousseau는 모든 동물을 “하나의 정밀한 기계”로 규정하며, 인간의 신체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Rousseau, 1755/2003a). 다만 본능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그 명령을 거스르거나 따르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행위자라는 점에서 유일하게 구별될 뿐이다. 데이터리즘은 바로 이 유일한 차이, 곧 자유의지라는 예외를 거두어들인다. 유기체를 알고리즘으로 환원하는 데이터리즘의 논리는, Rousseau가 인간에게 남겨두었던 그 예외마저 알고리즘이라는 형식 안에 내장시켜 버린다. 이 점에서 데이터리즘은 Rousseau와 동일한 출발점, 곧 기계로서의 신체에서 출발하되, Rousseau가 지켜낸 마지막 경계선까지 지워버린다는 점에서 그 전제의 급진적 연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층위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두 서사가 각자의 자연상태 가정을 소환하는 목적은 갈라진다. Rousseau에게 자연상태는 타락을 극복할 대안적 정치상태, 곧 일반의지를 예비하기 위한 장치인 반면, Harari에게 그것은 오늘의 위기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 도래했는가를 드러내는 진단적 역사성을 예비하기 위한 장치에 가깝다. 이처럼 두 서사가 갖는 각기 다른 목적과 유사성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능케 한다. ‘데이터리즘이 그리는 인간 조건은 Rousseau적 타락 서사의 21세기적 재연인가?’

III. 디지털 신자연상태의 규정과 위기의 구조

■ 인간 조건에 대한 가정이 정치적 응답을 예비하는 논증 구조라는 관점은, 데이터리즘이라는 새로운 가정 앞에서 두 가지 과제를 남긴다. 하나는 데이터리즘이 조성하는 인간 조건을 하나의 상태로 규정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그 상태가 무엇을 요청하는가를 밝히는 일이다. 본 장에서는 이 중 첫 번째 과제를 수행한다.

1. 디지털 신자연상태의 규정

1) 데이터리즘: 정의와 존재론적 함의

데이터리즘(Dataism)은 Harari(2017/2023)가 오늘날의 기술적·사상적 흐름을 포착하기 위해 명명한 세계관으로서, 세 가지 층위에서 그 특징을 정의해 낼 수 있다. 첫째, 존재론적 차원에서 데이터리즘은 유기체를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곧 감각과 감정, 판단을 데이터

처리 과정으로 간주한다. 인간의 판단도 신경계에서 수행되는 유기체적 알고리즘의 산물이므로, 원리상 이를 더 정확하게 수행하는 외부 알고리즘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함의가 여기서 도출된다. 둘째, 인식론적 차원에서 데이터리즘은 충분한 생체·행동 데이터와 연산 능력이 주어진다면 외부 시스템이 당사자보다 당사자를 더 잘 알 수 있다고 전제한다. 유기체적 인간으로서 자기 인식의 특권적 지위가 부정되는 것이다. 셋째, 실천적 차원에서 이상의 두 특징은 권위의 이동으로 귀결된다. 즉, 무엇을 볼지, 무엇을 살지, 누구와 관계 맺을지에 대한 판단의 권위가 개인의 내면에서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옮겨가며, 개인은 시스템이 산출한 최적의 선택지를 승인하는 존재로 재배치된다(Harari, 2017/2023).

이 세 특징 가운데 유기체를 알고리즘으로 환원하는 존재론적 성격 규명은 자유의지의 실재성 자체에 대한 도전을 담고 있다². 인간의 신체를 정밀한 기계로 간주하되 자유의지라는 유일한 예외를 통해 인간을 동물 및 기계로부터 구별했던 Rousseau(1755/2003a)의 구도에서, 데이터리즘은 바로 그 예외 조항을 거두어들이는 급진적 연장에 해당함은 이미 확인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데이터리즘이 조성하는 이 조건을 ‘자연상태’라 부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2 본 연구는 자유의지의 존재론적 실재성 여부를 판정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데이터리즘이 자유의지의 실재성에 대해 제기하는 존재론적 주장과, 그 주장이 겨냥하는 실천적 조건의 변화 — 곧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의 자리가 알고리즘 시스템에 의해 잠식되어 가는 현상 — 는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진단 대상은 후자이며, 이하에서 데이터리즘의 존재론적 주장을 서술하는 대목들은 그것이 오늘의 조건을 규정하는 관점으로서 지니는 영향력에 주목한 것이지 그 주장을 본 연구의 전제로 채택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판단이 유기체적 알고리즘의 산물이라는 논제를 받아들일 경우 잠식될 자유의지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되나, 본 연구가 진단하는 실천적 조건의 변화는 그러한 존재론적 논제와 무관하게 성립하며, 데이터리즘을 하나의 위기로 인식하는 문제의식 자체가 이미 이 층위에서 성립하는 것이기도 하다.

2) 대안 이전의 상태로서의 자연상태

자연상태 개념이 역사적 사실의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응답을 예비하도록 설계된 목적론적 구성물이라면, 그 개념적 요체는 ‘정치사회 이전의 상태’라는 시간적 차원이 아니라 ‘응답 이전의 상태’라는 조건적 차원에서 성립한다. Hobbes와 Locke에게 자연상태는 사회계약이라는 응답 이전의 상태였다. 그런데 Rousseau의 서사는 이 위치가 정치사회의 바깥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Rousseau가 진단한 타락한 사회상태는 이미 법과 제도가 작동하는 정치사회의 내부였으나, 일반의지에 기초한 정치상태라는 응답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대안 이전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 즉 세 사상가의 자연상태가 공유하는 것은 원시성이나 무정부성이 아니라, 어떤 응답을 요청하는 기능적 결함 상태라 할 수 있다³.

이 관점에서 보면 오늘의 디지털 조건을 신자연상태로 명명하는 것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그것은 알고리즘 시대가 문자 그대로의 원시 상태로 회귀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데이터리즘이 조성하는 인간 조건이 아직 응답을 얻지 못한 결함 있는 조건, 곧 대안 이전의 상태라는 진단이다. 따라서 신자연상태라는 명명은 기술(記述)이 아니라 요청인 바, 그 조건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는 일이 곧 요청되는 응답의 성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Hobbes의 참혹한 전쟁상태가 절대권력을, Locke의 집행력 부재가 제한정부를 각각 예비했듯이, 디지털 신자연상태의 규정 역시 특정한 응답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관건은 이 상태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있다.

3 본 연구에서 자연상태라는 용어는 통상적 용법과 구별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통상 자연상태는 정치사회가 성립하기 이전의 원초적 조건을 가리키며, 앞서 검토한 세 서사도 그러한 의미의 자연상태였다. 그러나 응답 이전이라는 조건적 차원에서 보면, Rousseau에게 응답을 요청하는 결함 상태는 자연상태가 아니라 타락한 사회상태이다. 이하에서의 자연상태는 시간적 원초성이 아니라 응답 이전의 상태를 일컫는다.

3) 타락의 운동구조의 재연으로서의 디지털 신자연상태

디지털 신자연상태의 성격은 앞서 확인한 데이터리즘과 Rousseau 서사의 유사성 가운데 타락의 운동구조를 따라가 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Rousseau의 타락 서사는 완성가능성이라는 내부 잠재력이 정주와 비교라는 사회적 조건과 결합하여 사유재산과 불평등이라는 외부 제도로 외화되고, 그 제도가 역으로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운동구조를 이룬다. 이 네 단계는 디지털 조건에서 다음과 같이 재연된다.

첫째 단계는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잠재력이다. 인간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원하며, 누구와 관계 맺을 것인가는 본능에 의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어 가는 열린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 완성가능성이 그 자체로는 선으로도 악으로도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듯이, 이 가소성 역시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다.

둘째 단계는 디지털 정주와 상시 비교이다. Rousseau의 자연인이 정주와 협업 속에서 타인과의 지속적 상호 노출에 놓여 있었듯이, 오늘날 개인은 플랫폼이라는 디지털 공간에 정주하며 타인의 시선에 상시적으로 노출된다. 다만 그 노출의 강도와 범위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띤다. 조회수, 팔로워 수, 반응의 수치는 타인의 인정을 정량화하여 실시간으로 제시하며, 비교는 간헐적 사건이 아니라 접속이 지속되는 한 중단되지 않는 상시적 조건이 된다.

셋째 단계는 데이터로의 외화이다. 플랫폼에 정주하는 개인의 모든 행동 — 무엇에 머무르고 무엇을 지나쳤는가, 무엇에 반응하고 무엇을 검색했는가 — 은 흔적으로 남아 데이터로 축적되고, 이는 알고리즘 시스템이라는 기술적 형식 안에 내장된다. 우월과 소유를 향한 욕망이 사유재산이라는 제도적 형식을 얻었듯이, 인간의 내면적

성향은 이제 데이터라는 형식으로 외화되어 시스템의 자산이 된다. 주목할 것은 이 외화 국면에서 발생하는 소유의 비대칭이다. 한 뽕기 땅에 울타리를 치고 “이 땅은 내 것이다”라고 선언한 것은 적어도 그 땅을 일군 인간 자신이였다. 그러나 개인의 행동 데이터에 울타리를 치고 그 소유를 선언한 것은 데이터를 산출한 개인이 아니라 그것을 수집하는 시스템이다. 이 비대칭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외화되는 대상의 성격에서 비롯된다. 한 뽕기 땅은 그 자체로 하나의 몫을 이루지만, 개인이 남긴 흔적 하나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며 수많은 흔적과 함께 집적될 때야 비로소 예측의 자원이 된다. 산출자에게는 애초에 울타리를 칠 몫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또한 땅은 울타리가 쳐지는 순간 이전의 사용자에게서 떠나가지만, 흔적은 산출자가 계속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동안에도 시스템의 자산이 된다. 무엇을 빼앗겼다는 인식조차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디지털 외화 국면의 전유는 한층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타락의 외화 국면이 낳은 불평등이 부자와 빈자의 구분이었다면, 디지털 외화 국면이 낳는 불평등은 데이터를 산출하는 자와 데이터를 소유·처리하는 자의 구분이 된다.

넷째 단계는 시스템의 역지배이다. 개인의 행동에서 산출된 데이터로 구축된 알고리즘 시스템은 이제 역으로 그 개인의 판단을 조형한다. 추천 시스템은 개인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학습한 결과물이지만, 바로 그 학습의 결과가 개인이 다음에 무엇을 원하게 될 것인가를 선점한다. 인간이 만든 것이 인간을 규정하는 전도(顛倒)가, 법과 정치제도가 아니라 알고리즘이라는 형식으로 재연되는 것이다.

요컨대 데이터리즘이 그리는 인간 조건은 Rousseau적 타락 서사의 21세기적 국면이다. 다만 이 국면은 동일한 서사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Rousseau의 타락이 자유의지의 존재를 전제한 채 그 오용

과 왜곡을 문제 삼았다면, 디지털 국면의 전도는 판단을 조형하는 것은 물론 판단하는 주체의 자리 자체를 잠식한다는 점에서, 같은 운동 구조의 더 깊은 침투에 해당한다.

2. 잠식의 확산: 결정에서 파당까지

디지털 신자연상태의 잠식 현상은 판단 주체의 자리를 침식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잠식된 판단이 남긴 흔적, 그리고 그 흔적이 빚어내는 관계의 양상에도 같은 전도가 재연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이 재연을 결정의 잠식, 산출물의 전유, 관계의 왜곡이라는 세 국면을 통해 검토한다.

1) 결정의 잠식

알고리즘에 대한 의존은 처음부터 결정권의 상실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편의를 위한 자발적 위임에서 출발한다. 무엇을 볼지, 무엇을 살지 매번 숙고하는 대신 추천 시스템의 판단에 결정을 맡기는 것은, 유한한 인지 자원을 지닌 인간에게 어느 정도까지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위임이 일단 이루어지고 나면, 위임자가 그 위임 이후의 과정과 결과를 더 이상 평가할 수 없다는 인식의 문제가 발생한다. 알고리즘 시스템의 내부 작동은 그것을 설계하지 않은 이에게는 철저히 불투명한 절차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 불투명성은 시스템이 정교하고 복잡해질수록 더욱 심화되는 구조적 특성을 갖는다. 요컨대 위임이 이로운 것이었는지를 판단할 근거조차 위임하는 순간 함께 사라지는 것이며, 이것이 곧 판단의 권위가 알고리즘 시스템으로 이양된 상태, 알고크라시(algocracy)다(Danaher,

2016).

위임이 잠식으로 전환되는 계기는 이러한 불투명성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다. Susser 등(2019)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영향력 행사를 설득(persuasion)과 조작(manipulation)으로 구분하는데, 이 구분의 핵심은 개입이 작용하는 대상에 있다. 설득이 상대의 숙고 능력에 이유를 제시하여 호소하는 것이라면, 조작은 그 숙고 능력을 우회하여 인지적·정서적 취약성을 직접 겨냥한다.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이 개인의 클릭 패턴과 체류 시간, 감정적 반응의 이력을 학습하여 그 개인에게 최적화된 자극을 제시할 때, 이러한 개입은 당사자가 숙고에 이르기 이전의 지점, 곧 숙고가 발생할 여지 자체를 선점한다. 설득은 실패할 수 있지만 조작은 애초에 반박의 대상으로 인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작은 결정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결정이 이루어지는 조건 자체를 바꾸는 개입이라 할 수 있다(Susser et al., 2019; Yeung, 2017).

Frankfurt(1971)의 위계적 자유의지론은 이렇게 우회되는 숙고 능력의 정체를 더욱 정밀하게 드러낸다. Frankfurt에 따르면 인간은 특정한 것을 원하는 일차적 욕구(first-order desire)뿐 아니라, 그 일차적 욕구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기를 바라는 이차적 욕구(second-order desire)를 갖는다. 나아가 인간은 어떤 일차적 욕구가 단순한 바람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자신을 움직이는 의지가 되기를 바랄 수 있는데, Frankfurt는 이를 이차적 의욕(second-order volition)이라 불렀다. 알고리즘에 휘둘리는 충동이 아니라 스스로 승인한 원칙이 자신의 행동을 이끌기를 바라는 것, 곧 자유의지를 지닌 주체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이 이차적 의욕에 해당된다. 자율성은 이처럼 자신의 욕구를 검토하여 승인하거나 물리치고(이차적 욕구), 그 검토를 거친 원칙이 자신을 움직이는 의지가 되기를 의욕하는(이차적 의욕) 성찰적 거리

위에서 성립한다.

그런데 조작적으로 설계된 알고리즘적 자극은 정확히 이 성찰적 거리가 형성되기 이전의 지점, 곧 일차적 욕구가 발생하는 그 순간을 겨냥한다. 일차적 욕구를 이차적 욕구가 검토하기도 전에 — 영상 한 편을 다 보기도 전에 다음 영상이 재생되듯이 — 다음 자극이 제시되고, 그 자극은 다시 새로운 일차적 욕구를 촉발한다. 성찰이 개입할 시간적 여백 자체가 제거되는 것이다.

결정의 잠식은 이처럼 성찰적 거리가 형성될 계기 자체를 알고리즘적 자극이 선점한 상태를 일컫는다. 위임의 단계에서는 여전히 위임자가 원한다면 그 위임을 철회할 성찰적 거리가 남아 있었지만, 잠식의 단계에서는 그 거리조차 형성되지 못한다. 삶의 원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성은 이 성찰적 거리 위에서만 성립하는 바, 신자연 상태가 초래하는 첫 번째 결손은 바로 이 자율성의 훼손이다.

그러나 이 잠식의 순간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는다. 성찰이 개입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개인의 모든 반응 — 무엇에 머무르고 무엇을 지나쳤는가 — 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흔적으로 남는다.

2) 산출물의 전유

개인이 알고리즘 시스템에 남기는 흔적은 애초에 그 개인을 위해 설계된 목적의 부산물이다. 추천을 정교하게 하려면 시청 이력이 필요하고, 다음 상품을 제안하려면 구매 이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Zuboff(2015, 2019)가 지적하듯, 실제로 수집되는 데이터의 양은 이러한 서비스 개선의 목적을 넘어선다. 어디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무엇을 보다가 이탈했는지에 이르는 부수적 흔적 — 행동잉여(behavioral surplus) — 이 함께 수집되며, 이 잉여는 빅데이터를 형성하고 시스템

의 실질적 자산이 된다.

이 잉여가 사유화되는 과정은 단순한 수집을 넘어선다. 수집된 행동 데이터가 어떤 알고리즘을 거쳐 어떤 결론으로 가공되는지는 이용자는 물론 규제 기관에도 좀처럼 공개되지 않으며, 이 불투명성은 책임 소재를 묻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Mittelstadt et al., 2016). 잉여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 사후적으로 따져볼 경로가 없다는 점에서, 이는 앞서 확인한 결정 잠식의 불투명성과 같은 뿌리를 공유하되, 문제의 초점은 판단의 위임에서 산출물의 귀속으로 옮겨간다. 이 귀속의 구조는 앞서 확인한 소유의 비대칭, 즉 울타리를 치는 주체가 산출자 자신이 아니라 수집하는 시스템이라는 비대칭이다.

이렇게 전유된 잉여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수집 주체의 이익을 향해 처리된다. 개인이 자신의 흔적을 공동체에 유익한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지, 누구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를 스스로 헤아릴 자원 자체가 개인의 손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산출한 것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헤아릴 원천이 개인에게서 박탈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신자연상태가 초래하는 두 번째 결손이다.

또한 전유된 잉여는 금고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다시 학습되어 개인에게 다음에 무엇을 노출할지를 결정하는 데 쓰이는데, 무엇을 보여줄지에 대한 결정은 곧 그 개인이 누구와 어떤 관점과 마주치게 될 것인지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는 일이 된다. 콘텐츠의 노출과 타인과의 마주침이 분리되지 않는 플랫폼 환경에서는, 무엇을 보여줄지를 정하는 것이 곧 누구를 만나게 할지를 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결정의 순간에 잠식되었던 자율성과 그 결정이 남긴 산출물의 전유는, 개인이 타자와 마주치는 조건 자체를 조형하

는 국면으로 이어진다.

3) 관계의 왜곡: 반향실에서 파당으로

전유된 잉여를 학습한 시스템은 개인의 만족이라는 명분 아래 그에게 무엇을 보여줄지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 결정이 반복되면 개인은 자신의 기존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에만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그와 다른 관점과는 점차 마주치지 않게 되는 상태에 놓이는데, 이를 반향실 효과(echo chamber)라고 부른다(Bozdag, 2013). 반향실 안에서 개인은 자신의 것과 다른 관점을 접할 기회를 점차 잃게 되며, 자신이 속한 집단의 견해가 곧 세계의 견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쉬워진다(Nguyen, 2020).

이 협소화는 정보의 편향에 그치지 않고 정서적 역량의 변화로 이어진다. Vallor(2016)는 디지털 기술이 매개하는 관계 양식이 자기 통제, 공감, 정직과 같은 테크노 도덕적 덕의 함양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 반향실이 조성하는 조건은 이 점에서 특히 문제적이다. 낯선 타자의 고통에 반응하는 능력은 그 타자와의 반복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마주침 속에서 훈련되는 것인데, 반향실은 정확히 이 마주침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차단한다. 반향실 안의 타자들은 이미 자신과 견해를 공유하는 이들로 한정되므로, 공감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훈련의 계기를 얻지 못한 채 진영 내부로 수축된다. 내집단 밖의 타인과 정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역량이 훈련의 기회를 잃은 채 퇴화하는 것, 이것이 신자연상태가 초대하는 세 번째 결손이다.

이렇게 개인의 내면에서 진행된 세 결손 — 성찰적 거리의 소실로 인한 자율성의 훼손, 산출물의 향방을 헤아릴 위치의 박탈, 낯선

타자를 향한 공감의 퇴화 — 은 개별 이용자에 그치지 않는다. 이 세
결손이 진행되는 동안 개인은 판단의 자리와 산출물의 향방, 낯선 타
자와의 유대를 잃고 파편화되어 간다(Harari, 2017/2023). 그리고 파편
화된 개인은 상실한 결속을 자신과 견해를 공유하는 진영 내부의 유
대에서 구하게 되는 바, 이 결손을 안은 개인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그 결손은 정치체 수준의 현상으로 응축된다. 반향실 안에
서 형성된 견해는 같은 견해를 공유하는 이들과의 반복적 상호작용
속에서 더욱 극단화되는 경향을 보인다(Sunstein, 2009). 이러한 집단
극화(group polarization)는, 서로 다른 견해를 지닌 이들이 우연히 마주
치고 논쟁하며 서로의 입장을 조정해 가던 전통적 공론장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Habermas(1989)가 이론화한 공론장은 본래 사적 개인들이 공
적 사안에 대해 이성적으로 토론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는 공간을
가리켰다. 그런데 이 토론이 알고리즘에 의해 매개될 때, 토론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조건 —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한 최소한의 노출과 그것
을 숙고할 시간 — 은 이미 침식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 즉 공론장의
형식은 유지되지만, 그 형식이 원래 전제했던 숙의의 실질은 공동화
된다. 여론은 더 이상 토론을 거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
된 진영들이 서로를 향해 반응하는 과정에서 재확인될 뿐이다.

이렇게 형성된 진영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그 진영
자체의 이익을 향해 결속한다는 점에서, 특정 집단의 사익을 좇는
결사체이다. 결정을 스스로 헤아릴 자원을 잃고, 자신이 산출한 것
의 향방을 헤아릴 원천마저 박탈된 개인들이, 낯선 타자에 대한 공
감까지 퇴화한 채로 모여들 때, 그 결집은 공동체 전체의 선이 아니
라 진영의 이익을 향할 수밖에 없다. 결정의 순간에서 시작된 잠식
이 산출물의 전유를 거쳐 관계의 왜곡으로 확산되고, 마침내 파당

(associations partielles)이라는 정치체 수준의 위기로 응축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다.

이렇게 형성된 디지털 신자연상태 앞에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한다. ‘이 상태를 극복하고 개인과 공동체를 새롭게 결합할 응답은 무엇인가?’

IV. 대안으로서의 일반의지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 조건에 대한 가정이 정치적 응답을 예비하는 논증 구조라는 관점은, 데이터리즘이라는 새로운 가정 앞에서 두 가지 과제를 남긴다. 그 상태를 규정하는 일과, 그 상태가 요청하는 응답을 밝히는 일이다. 앞선 논의가 타락의 운동구조의 재연으로서 디지털 신자연상태를 규정하는 데 답했다면, 본 장에서는 그 응답을 다룰 차례이다.

1. 왜 일반의지인가?: 진단과 처방의 대응구조

Hobbes와 Locke의 처방은 각각 항구적 투쟁, 집행력의 공백이라는 정태적 결합을 겨냥해 설계된 것이었으므로, 운동구조로서의 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사상가의 자연인은 가소성을 갖지 않는 고정된 본성을 지니고 있었고, 그 본성이 낳는 결합 역시 정태적인 것이었다. 리바이어던이라는 절대권력이나 공정한 심판자로서 최소정부를 세우는 일이 처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것처럼 고정된 결합이라면 억제하거나 보완하는 것으로 해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자연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해진 본성이 낳은 결합이 아니

라,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가소성이 디지털 조건과 만나 특정한 궤적을 갖게 된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렇게 조형된 개인은 다시 데이터를 남겨, 자신을 조형한 시스템을 강화한다. 결합을 억제하거나 보완하는 처방이 신자연상태에 닿지 않는 것은, 억제해야 할 상태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스스로를 다시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반면 Rousseau의 처방은 애초에 운동구조에 대한 처방으로 설계되었다. 타락이 자연인의 선한 본성이 훼손된 결과가 아니라, 완상가능성과 사회적 조건이 결합하여 전개된 결과라면, 처방은 그 결합의 방식을 다시 구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원시로의 회귀가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 간 새로운 관계의 구성이어야 한다는 것이 Rousseau의 사회계약으로의 이행 논리였다. 디지털 신자연상태는 Rousseau적 타락의 21세기적 재연일 뿐 아니라, 그 귀결에서도 Rousseau의 진단과 만난다. Rousseau가 진단한 사회상태의 인간은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인정과 우월한 지위를 갈구하며, 타인의 시선에 예속된 채 자기 밖에서 살아가는 존재, 곧 관계에 둘러싸여 있지만 참된 결합에는 이르지 못한 존재였다. 신자연상태의 파편화된 개인 역시 같은 결핍을 반복한다. 공론장에서의 참여를 거부하고 공동체적 결속으로부터 벗어난 각자는, 그 공백을 반향실 안의 동질적 유대로 메우며 진영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상시적 연결 속에 있지만 그 연결이 결합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에서, 두 시대는 참된 결합 없는 연결을 공유한다. 그렇다면 요청되는 응답 역시 알고리즘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결합 자체의 재구성이어야 하며, Rousseau가 그 재구성의 원리로 제시한 것이 곧 일반의지(volonté générale)였다.

Rousseau(1762/2011)에게 일반의지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공통된 이익을 지향하는 의지로서, 사적 이익의 총합인 전체의지

(volonté de tous)와 엄격히 구별된다. 전체의지가 개별 의지들을 양적으로 합산한 결과라면, 일반의지는 각 의지에서 사적 특수성을 덜어낸 뒤에 남는 공통의 지향, 곧 다수결 이전에 존재하는 ‘무엇이 공동체 전체에 이익이 되는가’에 대한 질적 합의를 가리킨다. 여기서 ‘일반(général)’은 통계적 다수가 아니라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보편성을 뜻하며, ‘의지(volonté)’는 외부에서 부과된 규범에 대한 수동적 순응이 아니라 스스로 따를 법을 제정하는 능동적 결단을 뜻한다(윤황, 2026). 따라서 일반의지에 기초한 정치상태에서 각 구성원은 전체에 결합하면서도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한다. 스스로 제정한 법에 스스로 복종하는 이 자기입법의 구조 위에서, 인간은 욕망에 예속된 자연적 자유를 넘어 도덕적 자유를 획득한다는 것이 Rousseau의 처방의 요체였다.

이 개념 규정에서 주목할 것은, 일반의지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세 요소를 하나의 원리 안에 통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그것은 스스로 입법하고 스스로 복종하는 주체의 자율을 전제한다. 둘째, 그 입법이 향하는 곳은 사적 이익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공통 이익, 곧 공공선이다. 셋째, 이 공통 이익의 지향은 계산의 산물이 아니라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존재를 전체의 일부로 확장하는 결합 — Rousseau가 공동자아(moi commun)라 부른 유대 — 위에서만 성립한다. 자율 없는 공공선은 강제이고, 공공선 없는 자율은 방종이며, 유대 없는 결합은 계약서 위의 서명에 그친다. 일반의지는 이 셋이 서로를 조건 지으며 하나로 작동하는 원리이다. 그런데 앞서 규정한 신자연상태의 세 결손 — 성찰적 거리의 소실로 인한 자율성의 훼손, 산출물의 향방을 헤아릴 위치의 박탈, 낯선 타자를 향한 공감의 퇴화 — 은 정확히 이 세 요소가 각각 잠식되어 가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 세 잠식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파편화된 개인주의를 배경으로,

하나의 과정으로서 함께 진행되어 왔다. 진단과 처방의 대응은 이 지점에서 항목 대 항목의 대응으로 구체화 된다.

2. 자기입법의 회복

첫 번째 결손은 성찰적 거리의 소실로 인한 자율성의 훼손, 곧 알고리즘적 자극이 욕구에 대한 성찰의 개입 자체를 선점하는 상황이었다. 이 결손에 대한 응답은 자유의지의 형이상학적 실재성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않다. 진단된 것이 실천적 조건의 잠식이었으므로, 응답 역시 그 조건의 복원이어야 한다.

Rousseau에게 자유란 자신이 스스로 제정한 법에 복종하는 것이었다. 이 자기입법은 외부의 강요에 대한 수동적 반응이 아니라 무엇을 원칙으로 삼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능동적 행위이며, 훼손된 자율성이란 다름 아닌 이 행위를 수행하는 능력의 훼손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능력은 자신의 욕구를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물리치는 성찰적 거리 위에서만 성립한다. 결정의 잠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거리 자체가 제거된다는 데 있었다. 일반의지가 오늘의 조건에 요청하는 첫 번째 것은 이 거리의 복원이다.

다만 성찰적 거리는 그 자체로 완결된 목적이 아니라, 그 위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과정의 출발 조건이다. Rousseau의 구도에서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이성(성찰적 거리 위에서 무엇이 공동체 전체에 이익이 되는가를 판단하고, 양심은 그렇게 판단된 선을 향하도록 의지를 이끈다(Rousseau, 1762/2003b). 자기 보존을 향하던 자기사랑이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어 가는 것은 바로 이 경로 위에서다. 이 확장의 끝에서 개별의지는 일반의지에 스스로 일치하게 되는데, Rousseau는 이 일치에 도달한 인간상을 ‘유덕한 시민(le citoyen

vertueux)’이라 불렀다. 성찰적 거리는 이 전체 과정이 시작되는 최초의 조건이다. 거리가 없으면 이성이 작동할 자리가 없고, 이성이 작동하지 않으면 양심이 안내할 판단이 없으며, 따라서 확장은 애초에 시작되지 않는다.

Rousseau가 요구한 일치는 외부에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성찰을 거쳐 스스로 도달하는 것이었다. 알고리즘이 이 거리를 선점하는 조건에서는 일치와 불일치를 물을 자리 자체가 사라진다. 일반의지의 첫째 역할은 바로 이 자리, 곧 자기입법이 성립할 실천적 조건을 다시 여는 데 있다.

3. 공공선을 향한 소유의 재구성

두 번째 결손은 개인이 산출한 행동잉여가 산출자의 것으로 남지 못하고 수집 주체의 사적 자산으로 전유되는 상황이었다.

여기서 요청되는 응답이 잉여를 단순히 개인에게 반환하는데 그칠 수 없는 이유는, 행동잉여라는 산출물의 성격 자체에 있다. 한 뽕기 땅과 달리, 행동의 흔적은 산출된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Zuboff(2015)가 지적하듯, 지극히 개인적이고 특정한 맥락에 긴밀히 묶여 산출된 이 흔적은 은밀한 경로를 거쳐 집적되고 탈맥락화되며,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만 예측과 추천의 자원으로서 가치를 얻는다. 원래의 맥락에서 이미 분리되어 집적된 것을, 그 맥락의 유일한 소유자였던 개인에게 다시 온전히 되돌린다는 것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개념이다.

Rousseau가 사유재산이 낳은 타락에 대해 소유의 철폐가 아니라 사회계약을 통한 재구성을 처방했던 것은, 문제의 소재가 소유 그 자체가 아니라 소유가 향하는 방향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회

계약에서 각 구성원은 자신의 권리를 공동체 전체에 위임하지만, 이 위임은 상실이 아니다. 일반의지에 위임된 것은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다시 각자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이 논리를 행동잉여의 문제에 적용해 보면 요청되는 응답의 방향이 드러난다. 그것은 잉여의 수집 자체를 금지하는 것도, 잉여를 단순히 개인에게 반환하는 것도 아니다(Yeung, 2017). 관건은 개인이 산출한 것이 어디를 향해 쓰일 것인가를 그 산출자가 헤아릴 수 있는 위치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 헤아림이 사적 이익의 계산을 넘어 공동체의 선을 향해 열릴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자신이 산출한 것의 향방을 스스로 헤아릴 수 없는 개인은, 공공선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는 위치에조차 서지 못한다. 일반의지의 둘째 역할은 이 위치의 회복, 곧 산출물의 귀속을 사적 전유로부터 공동의 숙고 대상으로 되돌리는데 있다.

4. 확장된 유대와 파당에 대한 응답

세 번째 결손은 반향실 안에서 낯선 타자에 대한 공감의 진영 내부로 수축되는 상황이었으며, 이 수축은 앞선 두 결손과 결합하여 정치체 수준에서 파당으로 응축된다. 주목할 것은 Rousseau가 이 현상을 이미 예견된 위험으로 다루었다는 점이다. 사회 안에 부분적 결사체가 형성되면 각 결사체의 의지는 그 내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이되 국가 전체에 대해서는 특수한 것이 되며, 이러한 결사체들이 커질수록 개별 의지들 사이의 차이는 일반의지로 수렴되지 못하고 세력들 사이의 다툼으로 전락한다는 것이 사회계약론의 경고였다(Rousseau, 1762/2011). 반향실 안에서 형성되는 오늘의 진영은 이 경고가 겨냥했던 바로 그 구조, 곧 내부적으로는 결속하되 전체에 대해서

는 특수의회지로 작동하는 결사체의 21세기적 형태이다.

Rousseau가 이 위험에 맞세운 것은 결사의 금지가 아니라 의지의 확장이었다. 일반의지의 동력은 고립된 개인들의 계산된 합의가 아니라, 자기보존을 향하던 자기사랑이 이성과 양심을 거쳐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나온다. 이렇게 확장된 유대는 특정 대상을 향한 사적 친밀감과 구별된다. 그것은 낯선 타자를 포함한 공동체 전체를 자신의 정체성 안으로 통합하는 결합이며, 이 결합의 범위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경계에서 멈추지 않을 때에만 그 의지는 특수의회지가 아니라 일반의회지가 된다. 반향실이 초래하는 공감의 퇴화가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은 단지 정서적 역량의 개인적 손실이 아니라, 특수의회지가 일반의회지로 확장될 수 있는 통로 자체의 봉쇄이기 때문이다. 일반의회지의 셋째 역할은 이 통로를 다시 여는 데 있으며, 이는 진영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속의 범위를 진영 바깥의 낯선 타자에게로 열어내는 것을 뜻한다.

5. 종합: 재구성의 원리로서의 일반의회

이상의 검토는 남아 있던 두 번째 과제, 곧 디지털 신자연상태가 요청하는 응답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Rousseau의 응답이 오늘의 조건에서도 동일한 논리적 위치를 점유한다는 답을 제공한다. 그 위치는 동일하다. 일반의회지는 18세기에도 오늘날에도 회귀가 아니라 재구성의 원리이며, 타락의 운동구조가 전개된 이후의 조건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결합을 다시 구성하는 처방이라는 논리적 위치를 유지한다. 다만 그 재구성이 겨냥하는 대상은 달라졌다. 18세기의 일반의회지가 법과 정치체도로 굳어진 전도, 곧 불평등의 재구성을 겨냥했다면, 오늘의 일반의회지는 알고리즘이라는 기술적 형식 안에

내장되어 개인 수준의 세 결손을 거쳐 과당으로 응축되는 전도의 재 구성을 겨냥해야 한다. 자기입법이 성립할 성찰적 거리, 산출물의 향 방을 헤아릴 위치, 특수 의지가 일반 의지로 확장될 유대의 통로, 신자 연상태가 잠식한 이 세 가지는 일반 의지라는 하나의 원리가 요청하 는 세 얼굴이며, 어느 하나의 회복도 나머지 없이는 완결되지 않는다. 세 결손이 파편화된 개인주의를 배경으로 하나의 과정으로서 함께 진행되어 왔듯이, 성찰적 거리 없이는 헤아림이 불가능하고, 헤아림 없이는 공동의 선이 공허하며, 유대 없이는 그 선을 향한 확장이 일 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 의지가 오늘의 결손에 대한 응답일 수 있 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이 세 요소를 분리 불가능한 하나의 원리로 통 합해 온 개념이기 때문이다.

V. 결론 및 논의

■ 본 연구는 데이터리즘이 조성하는 오늘날의 인간 조건을 자연 상태론의 논증 구조 안에서 진단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일반 의지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Hobbes, Locke, Rousseau의 자연상태가 공유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응답을 예비하도록 설계된 목적론적 구성물이라는 점에서 출발하여, Harari가 진단한 데이터리즘적 인간상이 Rousseau의 타락 서사와 서술적·구조적·존재론적으로 유사함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데이터리즘이 조성하는 조건을 디지털 신자연상태로 규정하였다. 이 상태는 완성가능성이 사회적 조건과 결합해 외화되고 그 외화된 것이 역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타락의 운동구조가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형식으로 재연되는 것이며, 그 위기는 결정의 잠식에서 산출물의 전유를 거쳐 반향실 속 공감의

퇴화로, 다시 과당의 발생으로 응축되는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확산된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자기입법, 공공선, 확장된 유대라는 세 요소를 분리 불가능한 하나의 원리로 통합해 온 일반의지가, 오늘의 조건에서도 회귀가 아닌 재구성이라는 동일한 논리적 위치를 점유하며, 이 세 결손에 항목 대 항목으로 대응하는 응답이 됨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지니는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연상태론의 분석틀이 특정 세기의 정치철학적 유물이 아니라, 인간 조건에 대한 근본 가정과 그것이 요청하는 응답 사이의 논증 구조로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작동함을 보였다. 이는 홉스, 로크, 루소가 정초한 자연상태 개념의 본질이 정치사회 이전이라는 시간적 조건이 아니라 응답 이전이라는 기능적 조건에 있다는 재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재해석은 자연상태론이 다룰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18세기 정치사회 기원의 문제에서, 인간 조건에 대해 새롭게 제기되는 임의의 가정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다. 알고리즘과 데이터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다른 기술적·사회적 조건이 인간 조건에 대한 새로운 가정을 제기할 때마다 그 가정이 어떤 상태를 그리고 있으며 어떤 응답을 예비하는가라는 동일한 물음을 던져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취한 분석틀은 특정 기술 현상에 대한 일회적 진단을 넘어서는 방법론적 함의를 지닌다.

둘째, 본 연구는 Rousseau의 일반의지가 단순한 과거의 처방이 아니라, 오늘날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적 자원을 지니고 있음을 보였다. 이때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일반의지가 자기입법, 공공선, 연대라는 세 요소를 사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분리 불가능한 하나의 원리로 제시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알고리즘 시대의 위기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자율성의 회복, 데이터 주권의 재구

성, 사회적 연대의 복원을 각각 별개의 과제로 다루어 온 경향이 있다. 자기결정성이나 프라이버시 권리를 다루는 논의는 개인의 자율에, 데이터 정의나 알고리즘 책무성을 다루는 논의는 소유와 분배의 공정성에, 반향실과 양극화를 다루는 논의는 사회적 유대의 회복에 각각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이 세 흐름은 대체로 서로 독립된 문헌과 정책적 처방을 산출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가 확인한 것은, 자율 없는 공공선은 강제에 지나지 않고, 공공선 없는 자율은 방종에 그치며, 유대 없는 결합은 계약서 위의 서명에 불과하다는 상호 조건성이다. 성찰적 거리 없이는 산출물에 대한 헤아림이 성립하지 않고, 그 헤아림 없이는 공동의 선이 공허한 명목에 그치며, 유대 없이는 그 선을 향한 확장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세 과제가 병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개별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단일한 위기의 세 얼굴임을 시사하며,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대응 — 예컨대 자율성 강화를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만으로, 혹은 데이터 소유권의 법제화만으로, 혹은 온라인 공론장의 다양성 촉진만으로 — 은 그 하나만으로 나머지 두 결손을 방치한 채로는 신자연상태의 위기에 온전히 응답할 수 없다는 함의를 갖는다.

셋째, 이러한 통합적 관점은 도덕성에 대한 심리학적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자율적 판단, 공동체 지향적 동기, 정서적 유대라는 세 차원으로 나누어 각각을 별개의 심리적 기제로 다루어 온 기존의 접근과 달리, 본 연구가 재구성한 일반의지의 논리는 이 세 차원이 하나의 통합된 도덕적 주체성 안에서 상호 규정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정치철학적 논증을 통해 보여준다. 이는 도덕성을 인지적 판단 능력, 친사회적 동기, 공감적 정서 반응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측정해 온 심리학적 관행에 대해, 이 세 차원의 통합 자체를 하나의 이론적으로 정당화된 구성개념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일반의지 개념 자체가 논쟁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져 온 것은 아니다. Rousseau는 일반의지가 언제나 옳다고 하였으나, 이 무오류성은 일반의지가 공동의 이익을 향한 의지로 정의된다는 데서 수반되는 것일 뿐, 그것이 산출하는 판단이 사실로서 옳다는 주장은 아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무엇이 일반의지에 해당하는가를 식별하는 문제는 개념 규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이는 Rousseau 자신이 입법자(le législateur)라는 별도의 장치를 요청해야 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나아가 개인의 판단이 일반의지에 일치해야 한다는 요구는, 그 일치치를 외부에서 판정하는 권위가 성립할 경우 개인에 대한 강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전용될 수 있다. 이 위험은 오늘날의 조건에서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산출했다고 주장하는 알고리즘이 등장할 때 그것이 곧 일반의지라 불릴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Rousseau에게 일반의지는 구성원 각자가 스스로 도달하는 것이었으며, 외부에서 계산되어 제시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을 향하든 일반의지가 아니다. 본 연구가 자기입법을 세 요소 가운데 첫째로 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이론적 논증에 주력한 문헌 연구로서, 디지털 신자연상태가 초래하는 결손이 실제 개인의 경험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경험적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결손들이 실증적으로 측정 가능한 변인으로 조작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일반의지가 제시하는 응답이 실천적으로 어떠한 개입이나 제도적 장치로 구현될 수 있는지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는다. 둘째, 본 연구가 활용한 자기입법·공공선·연대라는 세 축은 신자연상태의 위기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였으나, 이 세 축이 실제로 상호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뿌리

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라는 본 연구의 결론을 고려할 때, 이를 개인 수준과 정치체 수준에 걸쳐 하나의 연속된 과정으로 온전히 통합해 서술하는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이다. 셋째, 본 연구는 데이터 리즘이 제기하는 자유의지의 존재론적 문제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고, 그 실천적 조건의 잠식에 논의를 한정하였다. 이러한 판단 보류는 형이상학적 논쟁에 매몰되지 않고 실천적 응답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론적 선택이었으나, 자유의지의 실재성에 대한 존재론적 물음 자체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한 정면의 논의는 별도의 후속 연구를 요청한다. 이 물음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지적 기능을 광범위하게 대체해 가는 오늘날, 철학사의 오래된 논제로 남아 있기보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게 다뤄지고 재조명되어야 할 질문이다.

끝으로, 일반의지가 오늘의 위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지니는 논리적 정합성을 넘어, 이를 현대 사회의 구체적인 제도적·기술적 조건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실천적 물음이 남는다. 성찰적 거리의 복원은 알고리즘의 제안과 개인의 승인 사이에 숙고가 개입할 여백을 확보하는 설계의 문제와, 산출물의 향방을 헤아릴 위치의 회복은 데이터의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그 사용을 함께 논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의 문제와, 확장된 유대의 통로는 이질적 관점과의 마주침을 촉진하는 플랫폼 설계의 문제와 각각 맞닿는다. 다만 이러한 방안들이 실제로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하는가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며, 기술·법·정책 영역의 학제적 논의를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 박호성, 「루소의 자연개념: ‘비판적’ 자연과 ‘창조적’ 자연」, 『한국정치학회보』, 27(1993), 37~58쪽.
- 윤황, 「심리적 구성개념으로서의 일반의지: 일반의지의 21세기적 소환」,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32(2026), 295~327쪽.
- 임의영, 「공공성의 정치철학적 기초: J. Rousseau의 문명관과 일반의지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6(2020), 37~73쪽.
- Bozdag, E., “Bias in algorithmic filtering and personalization”, *Eth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15(2013), pp.209~227.
- Danaher, J., “The threat of algocracy: Reality, resistance and accommodation”, *Philosophy & Technology*, 29(2016), pp.245~268.
- Frankfurt, H. G., “Freedom of the will and the concept of a person”, *Journal of Philosophy*, 68(1971), pp.5~20.
- Habermas, J.,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T. Burger, Trans.), MIT Press. 1962.
- Harari, Y. N., 『사피엔스』, 조현욱 옮김, 김영사, 2015.
- _____, 『호모데우스: 미래의 역사』, 김명주 옮김, 김영사, 2023.
- Hobbes, T., 『리바이어던』, 진석용 옮김, 나남, 2018.
- Locke, J., 『통치론』, 강정인, 문지영 옮김, 까치, 2022.
- Mittelstadt, B. D., Allo, P., Taddeo, M., Wachter, S., & Floridi, L., “The ethics of algorithms: Mapping the debate”, *Big Data & Society*, 3(2016), pp.1~21.

- Nguyen, C. T., “Echo chambers and epistemic bubbles”, *Episteme*, 17(2020), pp.141~161.
- Rousseau, J. J., 『인간불평등기원론』, 주경복, 고봉만 옮김, 책세상, 2003a.
- _____, 『에밀』, 김중현 옮김, 한길사, 2003b.
- _____, 『사회계약론』, 김중현 옮김, 웅진씽크빅, 2011.
- Sunstein, C. R., *Going to extremes: How like minds unite and divide*,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Susser, D., Roessler, B., & Nissenbaum, H., “Online manipulation: Hidden influences in a digital world”, *Georgetown Law Technology Review*, 4(2019), pp.1~45.
- Vallor, S., *Technology and the virtues: A philosophical guide to a future worth wanting*,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 Yeung, K., “‘Hybernudge’: Big Data as a mode of regulation by design”,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20(2017), pp.118~136.
- Zuboff, S., “Big other: Surveillance capitalism and the prospects of an information civilization”,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30(2015), pp.75~89.
- _____, *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 The fight for a human future at the new frontier of power*, PublicAffairs, 2019.



■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리즘(Dataism)이 조성하는 오늘날의 인간 조건을 근대 정치철학의 자연상태론(state of nature)이라는 분석틀로 진단하고, 그 응답으로서 Rousseau의 일반의지(general will)가 지니는 역할을 검토하였다. Hobbes, Locke, Rousseau의 자연상태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응답을 예비하도록 설계된 목적론적 구성물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Harari가 진단한 데이터리즘적 인간상과 Rousseau의 타락 서사가 갖는 유사성을 근거로, 데이터리즘이 조성하는 조건을 디지털 신자연상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Rousseau의 일반의지를 제시하였다. 일반의지는 자기입법, 공공선, 확장된 유대라는 세 요소를 분리 불가능한 하나의 원리로 통합해 온 개념으로서, 오늘의 세 결손에 항목 대 항목으로 대응하는 응답이 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본 연구는 자연상태론이 특정 세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작동하는 논증 구조임을 보이는 한편, 자율성·공공선·연대를 개별 과제로 다루어 온 기존 논의에 대해 이들이 하나의 위기가 지닌 세 얼굴임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지닌다.

주제어: 데이터리즘, 신자연상태, 알고리즘, 사회계약론, 루소, 자연상태, 일반의지



The Digital State of Nature in the Era of Dataism and the Role of the General Will

Yun, Hwang

(Pai Chai University · Clinical Psychology · Assistant Professor)

■ This study diagnoses the human condition shaped by Dataism — Yuval Noah Harari’s term for the worldview that regards organisms as algorithms and transfers the authority of judgment from the individual to data-processing systems — through an analytic framework informed by the state of nature in modern political philosophy. Moreover, it examines the role that Jean-Jacques Rousseau’s concept of the general will may play in response to this condition. The point of departure is the notion that the states of nature described by Thomas Hobbes, John Locke, and Rousseau are not historical descriptions but teleological constructs designed to prepare a political response. Building on the resemblance between the human image diagnosed by Harari under Dataism and Rousseau’s narrative of corruption, this study defines the condition shaped by Dataism as a digital state of nature and proposes Rousseau’s general will as an alternative response

to this condition. More specifically, the general will is shown to integrate three inseparable elements — namely, self-legislative agency, public good orientation, and emotional solidarity — into a single principle. This integration is argued to correspond, element by element, to three present-day deficits: the erosion of autonomy that follows the loss of reflective distance, the appropriation of behavioral surplus, and the atrophy of empathy toward unfamiliar others. Hence,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logic of the state of nature is not a relic of a particular century but rather an argumentative structure that continues to operate today. Furthermore, contrary to prior works that have treated autonomy, the common good, and solidarity as separate concerns, it suggests that they are three faces of a single, unified crisis.

Keywords: Dataism, digital state of nature, algorithm, social contract, Rousseau, state of nature, general will

- ◎ 투고 접수 2026. 07. 09.
- ◎ 심사 완료 2026. 08. 03.
- ◎ 게재 결정 2026. 08. 07.